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

12·3 계엄 123일 만... 파면이나 복귀냐

대통령 심판 역대 3번째... 경찰, 선고일 갑호 비상령
한국사회 찬반 갈등 심화... 선고 후 후폭풍 상당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현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는 것으로 온 국민의 시선은 이날 현재로 향할 전망이다.

» 관련기사 2면

현재는 1일 공지를 통해 2024년 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현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빛진 지난 123일간의 탄핵 정국을 종결짓는 날이기도 하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113일 만, 현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60일 내에 조기대

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는 오는 4일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이 된다.

반면, 현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국정을 수행한다.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변론 종결 이후 2주 내 선고 예상을 벗어나 한 달 가까이 미뤄져왔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한 사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현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거리

에서는 시민들의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고,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도 지속됐다. 이에 현재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탄핵 찬반 진영을 넘어 거세져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 찬반 진영이 둘로 나뉘어 갈등이 지속되어 온 만큼 현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찬반 진영별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선고일 갑호 비상령을 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상황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고 이후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적 갈등 수습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대 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첫발’

교육부 “실제 수업 참여 여부가 관건” 분석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지난달 31일 전국 40개 의대 중 제주대를 포함한 39곳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1년여 만에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집단으로 휴학계를 냈던 의대생 225명 중 사실상 전원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했다. 앞서 제주대는 복학 신청 마감일을 3월 24일에서 27일로 사흘 더 연장하면서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했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남아있던 미복귀자들 모두 학교로 돌아온 것은 맞다”면서도 “군 복무 등 개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225명 전원이 복귀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정확한 복귀 인원은 현재 집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브리핑을 통해 3월 말을 의대생 복귀 시

한으로 정하고, 전원이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인재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생 중 극히 일부를 빼고는 사실상 전원이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건은 복귀한 학생들이 모두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느냐다. 정부는 전원 복귀의 기준을 ‘통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 밝히면서 제적을 회피하려 등록·복학만 하고 수업에 불참하는 것은 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여부는 학생 수업 참여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 관탈섬·신도리 해안
‘해양보호구역’ 지정될 듯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시 추자면 관탈섬과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과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관탈섬 해양보호구역(1075km)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또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km)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영석기자



제77주년 4·3방사탑제 완전한 4·3해결을 기원하는 제77주년 4·3해원방사탑제가 1일 제주시 신산공원 4·3해원방사탑에서 열렸다. 강희만기자

제주도교육청 첫 추경... 353억 증액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본예산 1조5974억원보다 353억원(2.2%) 늘어난 1조6327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 재원은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96억원, 지방교육세·시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6억원, 기타 이전수입 1억원, 자체수입·기타 129억원, 기금전입금(교

육기관 등 설립) 41억원 등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경안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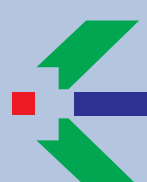
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 잇따라 적발... 4면

SINCE 1989
한라일보 36주년

한라일보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재활의 시작!

이방훈 재활의학과 의원이
제주도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방훈 재활의학과의원

제주시 서광로 157, 2층(종합경기장 입구 사거리)

TEL.064) 757-7557

